

# “예산안 철회·사과 먼저” vs “민생·경제 위한 예산안 필요”

(興)

(野)

與野 강대강 대치에 협상 난항  
우원식, 10일까지 합의시한 제시  
추경호 “민주당 사과·철회 없으면  
어떤 추가협정도 응하지 않을 것”  
박찬대 “민생 포함 예산 24兆 삭감  
예비비는 4.8兆 편성… 엉터리 예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예산안 처리 시한을 10일로 제시한 가운데,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 협상과 합의에 이르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감액만 반영된 예산안의 철회 및 민주당의 사과 없이는 협상에 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경제에 더 진정성을 보인 증액 예산안을 정부가 마련해 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예산안 협상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예산안에 대한 사과와 철회가 없으면 어떤 추가 협의에도 응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막바지

예산 협상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뒷구멍으로 예산 삭감안을 만들고 단독 강행 처리하기 위한 술수를 부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 운운하면서 증액을 이야기할 거면 왜 예산을 단독 강행 처리했나”라며 “처리하기 전에 여야간 협상이 이뤄져야 했다. 그게 지금까지 오랫동안 있었던 국회 관행이었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이 오는 10일까지 여야의 예산안 합의 시한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감액 예산안 사과와 철회) 조건이 선

행되지 않으면 그 어떤 협상에도 응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자체가 ‘엉터리 예산’이었다며 어려움에 빠진 정부가 민생·경제 분야를 더 살핀 증액안을 가져와야 협상에 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이 포함된 사업예산 24조원을 몽땅 삭감하고, 예비비를 무려 4조8000억원이나 편성한 게 민생경제 예산인가”라며 “이런 엉터리 예산안을 제출해놓고 민생과 경제를 들먹거리는

뻔뻔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묻고 싶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 보고 사과하라고 하는데, 적반하장도 분수가 있어야 된다”며 “진짜 사과해야 할 당사자는 정부와 국민의힘”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와 국민의힘이 털끝만큼이라도 민생과 경제회생을 바라한다면, 열토당도않은 소리 그만하고, 민생과 경제 회생을 위한 증액예산안부터 만들어서 갖고 오기를 바란다”며 “그래야 민생과 경제에 대한 최소한의 진정성이라도 확인되지 않겠나. 그럴 자

신이 없으면 정권을 반납하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사용 내역을 소명하지 못하는 검찰이나 감사원 등의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는 삭감해야 하고, 민생·경제를 위한 지역화폐 예산은 2조원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CBS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의) 예산 삭감에 대한 전체적인 콘셉트는 구체적인 소명과 예산에 대한 용도처가 소명이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삭감하겠다는 걸 미리 제시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어려운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밑에서부터 경제가 돌 수 있는 (지역화폐) 예산을 확보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며 “하나는 고교 무상교육 예산 9500억원 정도를 국가가 지방교육청에 떠넘기지 말고 국가가 책임지자는 것이고 인공지능(AI) 예산을 1조원 정도 확보해서 미래를 준비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 李, ‘상법개정 논의’ 정책 디베이트 참여

상법·자본시장법 함께 개정해서  
주주권리 보호 대원칙, 보완책 마련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등 당이 추진하던 경제 정책을 반복하는 결정을 연이어 내놓는 가운데, 4일엔 이 대표가 직접 좌장을 맡아 상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정책 디베이트(토론)에 참여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2차 정책 디베이트를 연다.

1차 정책 디베이트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놓고 당 내 의원들이 나눠 토론을 진행한 바 있다. 2차 정책디베이트에는 이재명 대표가 좌장을 맡고 오기형 위원장이 발제를 맡는다.

토론은 경영자 측 6~7인과 투자자 측 6~7인이 상법 개정과 관련한 찬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앞두고 한국 주식시장 저평가의 원인은 후진적인 기업기배구조에 있다며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선 이사 총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해 재벌 일가와 지배주주 지배권 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계는 민주당의 상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기업 경영 전반에 차질이 생기고 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민주당 일각에선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등 민주당이 추진하던 정책을 폐지하거나 유예한 이재명 체제의 민주당이 또 다시 상법 개정도 주저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1월28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본시장법이 합리적으로 개선되면 상법 개정 수준을 완화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상법은 전체 법인이 대상이지만 자본시장법은 상장 법인이 대상이다.

이 대표는 “원래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게 정확하고 맞는 것이긴 한데 (여당이 위원장인) 정무위 소관이라 될 리가 없다”며 “상법 개정이 아니라 공개 등록된(상장) 회사들에 대해서만 규제하는 게 바람직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쪽(여당)으로 키를 넘기면 안 할 것이다. 논의만 하다 끝날 가능성이 99.9999%”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주주에 대한 이사 총실 의무를 전체 법인이 아

나라 상장 법인에 한정하는 ‘핀셋 규제’를 하겠다고 지난 2일 밝혔다. 민주당의 상법 개정 공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한국 주식시장 저평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상법과 자본시장법을 함께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법 개정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으로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으로 주주권리 보호의 대원칙을 세우고,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개별 사안에 대해 구체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1500만 투자자들의 권익 보호와 저평가된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책임지고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 채 해병 국정조사 與 참여하며 ‘첫발’

국민의힘이 고(故) 채 해병 순직사건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여야가 모두 참여하는 진상규명의 장이 열릴 예정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2023년 7월 우리 곁을 떠난 채 상병 순직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며 “유상병 의원을 국조위(여당 측) 간사로 하고 총 7명의 국민의힘 의원께서 국정조사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채 상병 사건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데에는 정쟁에 악용할 목적이 다분하다”며 “이 사건은 경찰의 상세 수사 결과 발표에 이어 공수처 수사도 진행 중이고 국회도 입법 청문회, 탄핵 청문회, 상임위 현안 질의, 국정감사를 통해 솔하게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비극적 활동을 정쟁용 불쏘시개로 이용하기 위해 특검법에 이어 국정조사까지 시도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채 상병의 비극과 유가족의 슬픔을 정쟁에 이용할 공리만 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찍이 채 해병 순직사건 국정조사 참여 의사를 밝힌 민주당은 각종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채 해병 국정조사를 제대로 해내겠다”며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했다. 기왕 참여하기로 한 만큼 국정조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 韓-키르기스스탄, ‘포괄적 동반자 관계’ 격상

양국 정상회담서 경제협력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한 사디르자파로프 키르기스공화국(키르기스스탄) 대통령과 3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과 자파로프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외교 관계 수립 이래 지난 32년 간 다양한 분야에서 이룩해 온 양국 간 협력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또한 다방면에서 양국 간 교류를 더욱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번 정상회담에 따르면 양국은 투자

프로젝트, MOU(업무협약), 합작사업 등 경제협력을 확대 및 발전하기로 했다. 키르기스공화국 측은 에너지, 관광, 교통, 농업, 수자원 및 산업 분야에서 한국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투자 프로젝트를 한국측에 제안했다. 또한 양측은 에너지 효율, 에너지 보전, 재생 에너지 및 핵심광물 공급망 등 자원과 관련된 분야에서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에너지 분야 및 핵심광물 협력 양해각서(MOU)’의 서명을 환영했다.

양 정상은 키르기스공화국이 ‘그림자’ 경제로부터 전환하는 것을 촉진할 ‘BC카드’ 및 ‘스마트로’(이상 KT 자회사)와 키르기스스탄의 ‘CJSC 인터뱅크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키르기스스탄 공동성명 및 문건 서명식에서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과 포괄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프로세싱센터’ 간의 합작사업 출범도 반겼다.

두 정상은 공공행정, 농업, 보건·위생 및 환경 등 분야에서 키르기스공화국의 전략적 개발 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개발협력 사업들의 성공적 이행을

지지했다. 양측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국가 정보화 역량 강화 사업’, ‘공공기관 전기차 전환 사업’ 및 ‘농산물 가치사슬 강화 사업’의 출범 및 이행을 평가했다.

/박태홍 기자